

故 김용균 4주기...보신각에서 다시 울린 "내가 김용균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달라"

✎ 김준 기자 | © 승인 2022.12.10 21:55

아직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전무
"노조법 2조·3조 개정으로 노동 3권 확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확대 적용하라"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故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 © 김준 기자

고 김용균 4주기 기일인 10일, 보신각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김용균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구호가 울렸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추모기간의 마지막 날인 10일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노조법 2조·3조개정 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보신각에서 '김용균 4주기 추모문화제'를 공동개최했다.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故 김용군 노동자 4주기 추모제' © 김준 기자

4년 전 오늘, 태안 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시신은 5시간 후에야 발견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시켰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게 24살의 고 김용군 씨는 하늘의 별이 됐다.

이후, 그동안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업이 빈번히 저지른 안전수칙 미준수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또한 계속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목놓아 외치며 4년 뒤인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이뤄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아 시작부터 한계는 명확했다. 그러던 1월, 삼표그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로 지명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삼표그룹은 증거인멸 논란까지 일었지만 현재까지도 처벌받지 않았다. 삼표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효과도 미비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산업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총 303건, 사망자수 32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건, 20명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는 7건, 사망자수는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효과를 봤다고 하기에는 민망한 성적표였다.

아직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구호가 멈추지 않는 까닭이다. 10일, 보신각에 모인 이들은 공동주최 단위로 격문을 낭독했다. 격문은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과 노조법 2조·3조개정 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차현호 공동소집권자, 중대재해없는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가 낭독했다.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故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 © 김준 기자

이들은 정부는 삭감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 16시간 운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과로·과속·과적 죽음의 운행, 이제는 멈추고 싶습니다’라는 화물노동자의 발언을 옮기며 화물노동자들을 정부가 혐오로 제압했다”고 규탄 발언을 쏟았다.

이어 “진짜 사장은 책임이 없다하고, 파업은 기업에게 손해를 입힌다며 배상하라는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투쟁은 불법이 있을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이 노조법 2조·3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하고 “노조탄압을 위해, 무조건 하고 보는 회사 측의 손해배상소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노동3권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갖고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세상을 믿고 힘껏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그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목소리 높이며 “비정규직이라고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우리가 나서자. 노조 할 권리를 뺏겨 노동3권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모두가 일어서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온 우리가 앞장서자”고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故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 © 김준 기자

지난 7월 뜨거운 여름,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고된 노동으로, 일하다가 다쳐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건만 우리 사회는 가장 낮은 이들에게 가장 많은 차별과 혐오를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나와 다른 이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줄 것이 아니라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힘든 사람을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힘들이 모여서 연대로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균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빚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사회에 알려내고 이 문제점들을 바꿔 가듯,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듯,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고 전하며 “낮은 곳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바꾸고 좀 더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故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 © 김준 기자

그리고 이제는 한 어머니에서 투사가 된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은 “우리나라 하청 노동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 같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가 쉬운 불안한 고용형태로, 사측의 갑질에도 해고가 무서워 참을 수밖에 없는 악조건에 놓였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정부가 없애려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용균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하나 없다”고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김미숙 이사장은 “용균이에게 약속한 ‘억울한 죽음 없는 세상’을 위해 아픈 몸을 일으켰고, 용균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 민주화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故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 © 김준 기자

발언을 마친 뒤에는 세종문화예술회관까지 행진하며 함께 고 김용균 노동자 4주기를 추모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도착한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처벌하라 ▲공공성 확보로 정의로운 전환하자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3권 확보하자 ▲일하는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안전한 사회를 구호로 외치며, 김용균 4주기 추모기간의 마지막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